

대학 개혁의 새로운 방향

강 내 희 /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교수

국내 대학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쟁논리의 강화로 인해 대학이 생산할 지식이 기술과 실용 중심으로 치달을 때 발생할 문제가 적지 않다고 볼 때 '리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한 대학 개혁방안을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개혁의 또 다른 방식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새로운 방식은 통합학문 형태여야 할 것이다. 인간 능력의 통합화가 파편화보다는 낫다는 측면에서도 일단 통합학문적 접근이 분과학문 체제에 비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개별 대학과 국가 차원의 학문 전략 수립, 학문 세계 내부의 민주화가 필요하며 권위주의를 혁파해야 한다.

1

오늘날 인류 사회는 문명사적 전환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 자주 나오고 있다. 컴퓨터 공학의 눈부신 발전을 필두로 하여 극소전자 기술의 등장, 정보 양식의 대두, 예술 생산의 첨단 기술화 등 주로 과학기술의 엄청난 발전을 통하여 인류가 살아오던 방식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그 하나다. 다른 한편에서는 과학분야에 새로운 이론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전환의 지표라고도 한다. 카타스트로프 이론, 혼돈이론, 복잡성과 과학, 인공지능학, 인지과학

등 필자에게는 최근까지도 생소하던 과학이론들이 그래서 일상용어처럼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과학 분야에서도 분석 방식이나 대상 설정에서 과거와는 다른 인식들이 생겨나 이미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인간 주체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과거의 인간학적 문제설정 대신 언어과정(라캉), 이데올로기과정(알튀세르), 훈육과정(푸코) 등 물질적 과정들을 중시하는 관점들이 지난 30여 년에 걸쳐 나타났으며, 이로써 정신분석학, 이데올로기론, 계보학 등이 중요한 지식체계를 구성하게 되었고 여기에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등의 관점이 가세함으로써 입장과 관

점의 복잡한 지형이 만들어졌다. 또한 계급과 민족을 중심으로 사회 문제들을 설명하던 종래 비판이론의 틀도 성, 환경, 세대, 욕망, 인종과 같은 또다른 쟁점들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으며 변모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일일이 언급할 수 없는 문제들, 쟁점들, 갈등들이 표출함에 따라서 바야흐로 이론의 백가쟁명 시대가 벌어진 듯하다. 얼핏 보면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워 보이나, 이러한 변화는 현실과 이론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함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2

전통적으로 학술적 지식의 생산, 관리 또는 분배를 자신의 사회적 기능으로 삼아온 대학에도 이 순환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구의 대학사회는 이미 1960년대부터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수용하여 나름대로 체질 개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제 그 영향은 국내 대학의 운영 및 존재 방식에도 미치고 있다. 그동안 현실과 그 변화에 대해 무지가 아니면 무관심으로 일관해온 우리 대학계가 마치 오랜 수면 끝에 기지개라도 켜듯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작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이 변화에 박차가 가해지고 있다. 이제 대학의 조직이나 운영 방식을 옛날 관행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학문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반성이 일고 있는 듯하다.

교개위의 주도에 따라 대학들이 시도하고 있는 변화들을 학문의 생산과 분배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전과는 다른 몇 가지 정책

방향들이 드러난다. 대학을 획일화하지 않고 다양화하겠다는 것, 대학을 개방하겠다는 것, 대학을 교육공급자보다는 수용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교개위가 제시한 개혁 방안은 대학 모델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대학이 자기 사정에 맞게 특성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각 대학은 나름대로 특성화를 실행하고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대학에 따라 자기 특성, 조건 등에 맞게 일부 분야들을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맞물려 있지만, 다른 한편 수용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서 학부제 또는 계열화 정책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그동안 학과별로 폐쇄된 채 운영되던 교과목들을 개방하고, 학생들에게는 소속 학과의 경계를 넘어서 전공분야의 선택 폭을 넓혀주겠다는 것이다. 교개위는 이러한 변화시도의 목적을 교육의 개방성, 수월성, 실용성 등을 높이는 데 두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변화가 과연 대학의 발전, 학문의 발전 그리고 우리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한 검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3

일단 현재 추진되고 있는 변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듯싶다. 이미 쌀 개방 문제로 파동을 일으킨 적이 있는 우루과이라운드가 체결되고 그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함으로써 교육시장 개방이 눈 앞에 벌어질 마당에 대학교육도 시장 조건이 바뀌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원하던 원치 않든 경쟁의 한복판으로 내몰렸으니

안이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교개위의 개혁안은 그동안 학생 증원 외에는 대학 발전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던 대학사회에 충격 요법을 가함으로써 대학이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어떤 조직이든 자신의 능력으로 생존하지 못하면 내외에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대학이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조치는 최소한의 의무를 자각하게 하는 것이라 하겠다. 조금 더 나아가서 개혁방안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자면, 몇 가지 대학 모델들을 제시함으로써 각 대학이 발전 방향을 모색할 때 극도의 혼란에 빠지는 것만큼은 방지하려 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정도에서 교개위 개혁안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끝내고자 한다.

작년 이후 대학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들을 관찰한 바로는 활기찬 개혁 추진은 커녕 진지한 자구노력도 되지 못하고 대체로 혼란과 눈치보기의 부정적 측면이 더욱 돋보였던 듯싶다. 더한 것은 '변화'를 계기로 대학 발전과는 무관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다.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대학의 생존 경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분야들은 폐쇄의 대상이 되고, 특히 문과계열의 학과들은 일대 수난을 당하고 있다. 지금 중시되는 것은 개별 대학의 생존이지, 학문 분야의 생존이 아니다. 학문 분야들의 폐쇄, 존폐, 통합을 대학의 생존에 유리한지 여부로 판단하는 일이 자행되어 대학이 애초에 왜 생겼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벌써 일부 대학에서는 인문학과들을 없앴다는 소문이 돌리고 있으며, 또한 학부제를 추진하면

서 학문체계상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방식으로 학과들을 통합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필자는 통합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중에 밝히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통합에 따르는 학문이론적 검토는 외면한 채 먼저 통합부터 하는 것이다. 일례로 영문학, 독문학, 불문학의 합동과목을 실시하는 대학이 있다는데 듣기에는 그럴 듯하지만 교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이며, 합동강의의 계획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자못 궁금하다. 게다가 이런 중요한 정책이 정작 해당학과 교수들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되었다고 하는 데 이르러서는 파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교개위나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학 개혁의 책임을 대학이 지도록 결정을 대학들에 일임하는 보기도문 조치를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대학들이 해오던 관행 그리고 현재 폐과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한 인문계 학문 분야의 관행들이 옳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국내 대부분 대학들은 실질과 명분 모두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학문 분야들을 운영해왔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550여 개 학과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학문체계와는 별도로 학과체계를 존속시켜 왔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전공 분류가 학문의 성격에 따른 것이 되지 못했으며, 심한 경우에는 교수의 면면에 따라 되는 비학문적 파행이 이루어진 점도 컸다. 인문학 쪽에서는 인간다운 교양을 함양한다는 명분으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교육을 자랑스레 한 측면도 적지 않다. 그래서 필자는 교개위의 개혁방안으로 제시되는 대학교육상의 변화들은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려 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개혁'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편이다. 그러나 이 '개혁안'에는 개혁의 요지가 분명히 있다. 필자는 새로 나온 '개혁안'이 대학의 전통적 위상을 위축하며, 특히 학문 또는 지식 생산을 과거보다도 권력에 더욱 종속시키는 반대학적이고 반학문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고 본다.

4

이번 개혁방안은 뭐니뭐니 해도 연구와 교육의 효용성을 강화하려는 강한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대학들에서 추진하는 구체적 개혁 과정에서 기술과 실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주되게 드러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개혁의 방안은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대학의 중심 위치를 차지하던 인문계열을 약화함과 함께 학과의 통·폐합이나 정원 조정 등을 통하여 자연과학 계열이나 응용학문 쪽 등 교육에서 기술과 실용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계열 내부의 변화 유도를 통하여 인문학의 실용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필자가 전공하는 영문학의 경우에도 실용영어의 강화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1996년도 봄학기 신입교원 채용에서 인문학 전공자보다는 영어회화 과목 등을 맡을 외국인 실용영어 담당자를 고용하겠다는 공고가 월등히 많다는 사실을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그리고 한 때 대학의 모델로 연구대학, 교양대학, 기술대학, 전문대학 등으로 분류하던 지금도 소수 대학들만 연구대학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기술교육 쪽으로 유도하려는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다.

이처럼 기술 중심의 학과 편성과 정원 조

절이 일어나는 것은 첨단기술의 발전이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는 문명의 대전환에 따른 대응일 것이다. 그리고 인문학 등이 그동안 그것을 전공한 사람들에게 현실 적응력을 제대로 부여하지 못한 점이 적지 않았음을 생각할 때, 또한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지 않다는 점을 생각할 때 피할 수 없는 조질로 보이는 측면도 적지 않다. 그러나 대학을 기술이나 실용 중심으로 재편하는 데에는 대학의 기능을 포함하여 학문의 성격과 관련된 중요한 발상의 전환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학문이론적으로 그 함의를 따지는 것을 생략할 수 없다. 대학은 이미 언급했듯이 사회적으로 지식을 생산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분배하는 기능을 위임받은 사회적 조직이다. 따라서 오늘날 대학을 기술과 실용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은 지식의 성격을 바꾸는 일이며, 지식의 생산, 관리, 분배와 관련된 관행을 새롭게 정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지금 떠오르는 요구는 대학에서 생산하는 지식이 실용성을 가져야 한다는, 따라서 지식을 기술화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식이 곧 쓸모있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은 일면 타당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지식을 생산하는 대학 자체의 성격을 무시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이때 유념해야 할 것은 지식과 기술이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지식이 반드시 실용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물론 모든 지식이 기술과 실용성을 외면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다만 지식과 기술은 서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관계 속에 연계되어 있으며 이 연계의 양상은 문명의 조건, 사회적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 지식의 기술화를 절대

명령으로 만들면 지식 자체가 새로운 성격을 갖게 되어 기술 개발에서 지식이 도구로 전환될 것이다. 그런데 기술 개발에서는 비효율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요구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 마찰, 스트레스 등을 구조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지식은 이들 불편하고 쓸모 없는 기술의 조건과 상황들을 제거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지식은 다만 기술을 위해 기능을 해야 하므로 지식에게는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수행성의 원칙만 주어지고, 문제와 이의 또는 비판을 제기하는 역할은 주어지지 않는다. 기술화 과정에서 문제, 이의나 비판을 제기하는 기회가 많을수록, 즉 제동을 거는 경우가 많을수록 기술화에는 더 많은 장애가 생기며 기술 개발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화라는 것이 특히 자본의 논리와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심각해진다. 자본을 운영하는 쪽에서 보면 이윤회수 기간은 단축될수록 좋은데 문제제기는 자본이 자기 증식하려는 욕망에 제동을 거는 셈인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학문과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이의제기,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다. 학문 수행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권리의 확보는 학문에서 자유를 확보하는 문제이다. 자유로운 토론,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 그리고 지배관계에 대한 발본적 문제제기, 이러한 비판의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학문이 발전하겠는가? 비판의 자유가 없는 대학이 대학답지 못하게 보이는 것은 비판 없이는 대학이 학문 수행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다. 이견을 제출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사회나 조직이 제대로 여유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며, 그러한 사회의 운명이 좋지 않다는 것은 현실 사회주의권의 붕괴에서도 확인되었다. 현실 사회주의권은 내부 비판을 봉쇄함으로써 권력의 경직화 경향을 막지 못하고 자생력을 상실하여 붕괴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자본주의는 내부 비판을 어느 정도 허용함으로써 아직까지는 갱신의 길을 계속 걸어온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기업계에서 경직적 조직의 대표적 경우인 포디즘 체제에 대한 반성으로 리엔지니어링을 통해 조직의 유연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도 그런 예의 하나다. 이러한 자구 노력을 가리켜 일부에서는 자본주의의 '탁월성'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들뢰즈와 가타리가 지적하듯이 자본주의는 경직된 조직의 코드를 해체하는 탈영역화 운동을 하면서도 그 목적을 다시 재코드화하고 재영역화하려는 데 두고 있기 때문에 탈영토화에 한계를 두기 마련이다. 이 한계가 아마 이윤이라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한국 대학은 이 이윤 추구를 위한 대대적인 리엔지니어링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이 점을 학문하기에서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결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리오타르가 지적하고 있듯이 자본주의 체제내에서 지식 생산은 수행성의 원칙에 쫓아 운영, 관리된다. 무엇보다도 어떤 연구가 돈이 되느냐에 따라 특수 분야의 연구에 대한 지원이 결정되는 만큼, 실용성이나 기술의 중요성 강화는 결국 학문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며 특정한 방식으로만 학문하는 것을 강요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가 학문 수행에서 애초에 그 업적으로 만들었던, 전통적 권위에 대한 도전권

이 수행성의 원칙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권력에 의하여 묵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이다. 또한 기술 중심의 연구와 교육은 민족문화의 자주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국경의 구분 없이 무조건 기술의 우위를 추구하고 또한 실용성의 강화만을 외치게 될 때, 그리하여 세계체제가 균형을 놓은 틀에 따라서 무한 경쟁을 추진하려 할 때,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또는 효력이 없더라도 간직해야 할 부분들은 아무런 이의제기도 받지 않은 채 사멸해갈 것이다. 이러한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실용성의 강화가 정작 새로운 지배관계를 구축하는 수단이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기술은 신기술 지향으로 나아가면서 이데올로기 상으로는 전래의 지배관계를 그대로 인정하거나 심지어 강화하는 쪽으로 결말이 난다면 이는 오히려 통탄할 일이다. 학문이 인간관계와 연계될 수밖에 없다면 첨단 기술을 도입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 설정도 필요할 터인데 이를 위해서는 문제제기, 이의제기의 기회를 더욱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다.

5

국내 대학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의 관행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틀을 깨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해결책으로 나온 자본주의 방식이란 것도 썩 내키는 대안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교개위가 제시한 개혁방안으로 인해 일어나고 있는 대학 조직의 '리엔지니어링'이 일면 개혁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한국의 대학들이 아직도 전근대적

요소를 너무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효과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미 지적한 것처럼 경쟁논리의 강화로 인해 대학이 생산할 지식이 기술화로 치달을 때 문제들이 적잖이 발생할 것을 생각하면 '리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한 대학 개혁 방안을 선뜻 환영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렵더라도 개혁의 또 다른 방식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필자가 생각하는 대학 개혁 방향이라 싶은 생각의 일단만을 피력할 수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그리고 현재에도 한국의 대학들이 학문을 운영하는 방식이 분과학문 체제라는 것은 주지하는 바다. 이 학문 운영 방식은 학문체계상 상호관련이 있을 수 있는 분야들도 학과라는 자의적인 구획선을 그어 교통을 막고 있는 지극히 분할적인 방식이다. 이로 인해 분과로 인정된 학문분야들은 관념적인 자기완결성을 갖춘 자족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이 학과에 들어온 학생들은 이 가상의 자기완결성과 자족성으로 인해 파편화된 교육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파편화된 연구와 교육은 자본주의 사회를 지배하던 포디즘적인 생산체계에서는 통용되었지만, 포디즘의 경직성이 조직 운영에서 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극복해야 할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포디즘적 생산 방식에서는 생산 라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이 부분작업을 하는 일종의 기계 부품 같은 존재로 기능해야 했기 때문에 학문의 분할이 가능했지만, 최근에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유연적 생산방식에서는 한 노동자가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최근 LG 그룹에서도 도입한 '모듈러 셀'이라는 생산 방식에서는 20미터 정도 되는 생산 라인에 서너 명의

노동자가 투입되어 완제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이는 곧 오늘날의 작업 과정이 1인 다역을 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육과정에서 복수 전공제를 허용하자고 하고 이를 위해 최소학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학생이 여러 방면의 능력들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나온 대응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제도 도입은 그것이 학생들의 능력을 다면화할 수만 있다면 발전된 면이 있다. 물론 분야에 따라서는 지금보다 학점을 더 많이 취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학생들을 한 학과에 가두어놓고 '출입'을 금지한 채 한 분야의 학점만 취득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한 우물 파기든 여러 우물 파기든 선택은 마땅히 학생의 몫이며, 학교와 교수는 그 학생의 선택을 도와주는 데 관한 행사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현재의 변화에 분명히 바람직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변화가 실용주의, 기술중심주의로 흐르는 폐단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 하겠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은 분과학문의 틀에서 벗어나면서도 학문의 자유를 위축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새로운 방식은 통합학문 형태여야 할 것이다. 인간 능력의 통합화가 파편화보다는 낫다는 측면에서도 일단 통합학문적 접근이 분과학문 체제에 비해 바람직하다. 세상 일이란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인식의 차원이건 기술 습득의 차원이건 아니면 문제 해결의 차원이건 학문 분야나 영역들을 분할하여 그 일부만을 집중 연구·조사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대상의 수준이 갈수록 발본화해 간다는 점을 생각할 때 비본질적

수준에서 학문 분야들을 분할하는 것은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신체 기관의 수준에서 세포 수준으로, 다시 분자 수준으로 탐구의 층위가 이동하게 되면 기관 수준에서 만들어 놓은 학문의 분과들은 과거의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이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어떤 단위를 발견했는가 여부가 아니다. 그보다는 그러한 단위를 상정할 수 있는가, 또 상정이 가능하다면 그 단위들과 다른 단위들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들을 따짐으로써 문제들의 지형을 그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또 다른 예로 자본주의 대중문화의 만연으로 인문학의 연구 방식에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문자문화 이외에 영상문화가 일상화함으로써 과거 책으로 소양과 기술을 익혔던 인문학 분야에서도 자기의 추억이나 경험의 근거를 영상을 포함한 대중매체에서 찾는 세대가 출현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있다. 고전 또는 경전을 대중문화 텍스트에 비해 딱히 우월하게 보지 않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양자를 의미작용(기호학), 성차(페미니즘), 계급(마르크스주의) 등 새로운 문제들에서 분석함으로써 인문학이 과거에 중시하던 가치의 문제와는 다른 문제들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변동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교개위 개혁안에 이러한 점에 대한 고려는 없어 보인다. 통합학문적 접근은 지금까지 종합대학들이 운영해온 분과학문 체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나, 또한 교개위 안에 따라 추진되는 학부제 추진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분과학문 모두가 폐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사실 어떤 한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이룩한 학문적 발달이 다른 분야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대로 학부제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는 각 학문 분야에 대한 차별 지원 정책이 깔려 있으며, 이 결과 더 많은 학문분야들이 퇴보하는 일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현재 모든 대학들이 일색으로 분과학문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지양할 필요가 있을텐데, 이와 함께 학문분야들을 새롭게 편성하는 시도를 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기는 힘들겠지만, 하나의 방식을 가상해 본다면 지금까지 분할되어 아무런 상호 연계를 갖지 않고 편성되어 있는 분야들을 통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다. 이 과정에서 최근의 기술 발전의 추세를 외면하거나 거부할 필요는 절대로 없다고 본다. 다만 기술주의에 빠져서 비판 정신을 상실하는 것은 막아야 할텐데, 이를 위해서 예를 들어 인문학적 상상력과 예술의 감수성, 공학의 실험성 또는 정밀성, 사회과학의 수행 또는 비판 능력 등을 결합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서구에 중요한 학문 분야로 성립된 '문화연구'는 인문학이 종래 중시하던 텍스트 분석과 사회과학이 중시하던 행위 분석을 결합하는 경향이 있고, 텍스트와 행위의 의미작용, 영향, 그것들의 맥락을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중매체, 하위문화, 민속지, 계급, 성 등의 다양한 분야와 맥락을 연구하는 통합학문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예술 생산 방식에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기술 도입이 일어남으로써 종래의 예술가라는 인간 중심적 생산과는 다른 방식이 등장함을 생각할 때 예술과 공학의 결합을 생각하는 것은 이미 상식이다. 현재 예술 분야 전공자

중에 컴퓨터 학원에 등록하여 컴퓨터 그래픽을 배우고 CAD를 배우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학들은 이들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인문학, 예술, 사회과학, 공학 분야들을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즉 학문분야들의 편성이 대학의 중요한 과제가 되는 셈이다.

6

그래서 개혁 과정에서 대학들은 각자 어떤 형태의 통합학문들을 운영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곧 학부제 도입 이전에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은 학문 분야들의 성격 규정이며 그들간의 관계 설정이라는 말이다. 물론 결정은 각 대학의 시설과 설비 수준, 교수 역량의 확보, 학생의 수준 등 사정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된 후 나와야 하겠지만 몇 가지 원칙은 이제라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결합, 더 나아가서는 '컨텐츠웨어(contentware)'의 결합까지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위에서 상이한 분야들의 결합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 것도 서로 다른 학문과 교육 층위들의 다양한 결합을 모색하자는 것인 만큼 이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여기서는 학문의 탄력적 발전, 교육의 효과적 실천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만난 적이 없는 분야들의 결합을 상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다른 한편, 통합학문은 학문 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며 학문의 제도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학문의 결합은 어쨌거나 학부제와 같이 새로운 형태의 행정, 교육, 학문의 단위들을 필요로 하게

마련이다. 조금 성급하게 말한다면 몇 가지 제도상의 개혁을 생각할 수 있다. 학과는 물론이고 단과 대학들까지 넘나드는 학점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 교수들을 단일 학과에만 소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대학 과목을 맡을 수 있도록 할 것, 합동과목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과목 운영 방식을 개발하는 일, 신입교수 채용에서 대학별 학문 정책을 관철할 수 있도록 학문 전략을 짜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제도 개혁만 생각하더라도 학문의 운영과 대학 운영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많은 모험이 따르고 위험 부담이 높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틀을 뒤흔드는 실험과 개혁의 기회가 그만큼 확보된다. 지혜를 짜서 위험은 최소화 하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노력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

따라서 학문 운영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대학마다 학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국내 대학 총학장실에 대학기구표가 비치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자기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문 분야들의 총람표가 있을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이 학문에 제도적 장치를 부여하는 장소이기도 함을 생각할 때, 학과표와는 별도로 자기 대학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문 분야들의 실상과 그것들간의 연계를 말해주는 상황표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대학의 기획실은 등록금 인상률, 학교 발전 전략으로 흔히 생각하는 시설 계획 등과 관련된 구상과 기획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학문 분야들의 발전 전략을 짜는 데 핵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개별 대학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학문 전략 수립이 사실 더 시급하다. 통합학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연구자의 양성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육시장 개방을 앞두고 민족 학문에 대한 지원도 절실하게 요청된다. 또한 실험대학의 국가적 지원이나 한국학 기지와 같은 것을 설립하여 지원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정신문화연구원 등을 설립 운영하면서 범했던 과오 같은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신문화원은 설립 의도야 어떠했건 국학연구가 체제 유지와 연루되었으며, 특히 5공 시절에는 '새마을 교육'장으로 이용됨으로써 학문적 지원과는 거리가 먼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국가가 학문 관련 정책을 펼칠 때는 지원은 최대한으로 하되, 간섭은 최소로 해야 한다는 고래의 원칙은 지금도 유효하다.

여기서 학문에서 필요한 '진보'의 개념을 따져볼 필요를 느낀다. 진보는 발언의 권리를 갖추어야 하는 새로운 집단, 세대 등이 등장했을 때 그들의 발언 기회를 봉쇄하는 기득권 세력의 권력을 약화하거나 새 집단의 권력을 강화함으로써 상호간에 권력 배분의 형평이 이루어지는 데서 이루어진다. 이 권력 배정은 정치와 같은 자명한 권력 행사 영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피에르 부르디외가 분석한 것처럼 상징 자본이나 문화 자본의 배분에서도 일어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학문 영역에서도 권력의 문제는 발생한다. 이를테면 교수와 학생 사이, 원로교수와 신진교수 사이에는 늘 권력의 형평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환경이 있다. 따라서 학문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민주화는 필수적인 요소인 셈이다. 통합학문의 제도화는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학문의 신규 세력들간의 갈등을 필연적으로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학문의 진보와 민주화를 동시에 사고하고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곧 학문 세계 내부에 평등과 자유가 동시에 보장되는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권위주의와 같은 것은 혁파해야 함을 의미한다. 권위주의는 자유로운 상상력, 문제제기의 길을 열고 답을 미리 제출함으로써 문제제기에서 출발해야 하는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제기의 자유가 없다면 이는 내부의 이견을 허용하지 않는 독재적 상황을 조장하는 것이 되며 결국 학문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7

학문의 '진보'를 위한 조건과 관련하여 많은 것들이 호도되고 있는 것 같다. 교개위와 정부의 대학 개혁안은 무엇보다도 자본의 논리를 확산하는 데 더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되는 학부제는 실용주의의 강화를 낳을 뿐이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문 분야들의 제도적 설치를 포기하는 일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더욱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것은 개별 대학으로 보면 피치 못할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사회적 차원에서 볼 때 이 강요된 선택이 학문의 발전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사회의 학문 및 교육 능력은 사회의 지식생산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학문 운영 방식의 내실화뿐만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학문·교

육 정책을 모색하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새로운 대학의 상에 대한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신설 대학들이 기존의 대학이 운영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학문 분야들을 운영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해야 할 것인지는 따져볼 문제다. 그러한 점에서 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정신문화연구원처럼 종합대학과는 다른 체제를 가진 연구·교육 기관들의 다양화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이들 특수 학교들 이외에도 새로운 형태의 지식생산 기관의 설립에 대한 모델 연구도 필요할 것 같다. 이를 통해 실험의 영역이 확장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다. 학문에서 실험은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는 노력이며, 억압적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자유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다. 학문의 목적이 지식의 생산이라면, 교육의 목적은 또한 인간 능력의 배양에 있을 것이다.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도덕적·감성적·지적 능력 등 다방면의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느끼고, 알고, 따지고, 일하는 능력의 배양은 획일화된 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능력을 키우는 것을 놓고 일어나는 절차, 권력, 배분 등을 둘러싸고 민주화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강내희/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박사 졸업하고, 미국 마케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앙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문회이론전문지 『문화과학』 발행인 겸 편집인, 서울문화이론연구소 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공간, 육체, 권력』이 있고, "독점자본주의와 문화공간 롯데월드론",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의 이론적 한계와 권권", "백희점과 근대적 지식체계", "문학 연구와 교육의 담론이론적 모색"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